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6. 3. 10(목)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기업수출지원과 과장 윤현주 / 사무관 박순홍 (Tel. 044-200-2221/2223)
<p>* 엠바고 : 3.10(목) 13시 30분(행사 종료)이후 사용</p> <p>* 말씀자료 별도배포</p>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기초가 튼튼한 경제 가능

- 황교안 총리,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제도약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

□ 황교안 국무총리는 3.10(목)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릴레이 행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박성택), 부회장 대표(이연수 세복식품 대표, 이흥우 세평통상 대표, 장성숙 우신피그먼트 대표, 김신길 아세아텍 대표, 최현규 보령장갑 대표,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심승일 삼성가스공업 대표 등), 중소기업연구원장(김세종), 중소기업학회장(송혁준), 중소기업청장, 산업부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 이날 간담회는 세계 경기침체와 유가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이 경기위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책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황 총리는 중소기업이 경기위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고,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규제프리존'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이에 중소기업계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확대 등의 정책에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 한편, 황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지난 2.25 대한상의에 이어 오늘 중기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무역협회(3.17일 예정), 여성경제인연합회(3.28일 예정), 중견기업연합회(3.29일 예정)와 간담회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중소기업중앙회 현황

2.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요내용 (중소기업청)

- 설립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 회 장 : 박성택, 임기 4년('15.2.28 ~ '19.2.27)
- 주요 연혁
 - 1962. 5 중소기업중앙회 설립
 - 1984.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설치
 - 1997. 4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개원(용인)
 - 2007. 9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출범
 - 2012. 5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
 - 2012. 6 중소기업 DMC타워 준공
- 조직 및 회원 ('16. 2. 29 기준)
 - 회장(1), 부회장(25), 상근부회장(1), 이사(30), 상근이사(3), 상임감사(1), 상근이사에 준하는 상근임원(6)
 - 조 직 : 7본부, 31실(부·국), 13지역본부(5지부)
 - 회원수 : 583개 ('16. 2. 29 기준)
 - * 조합회원 552(전체 939개 조합중 58.8% 가입), 중소기업 관련단체 31
- '16년 예산
 - 회계운용 :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 예산규모 : 2조 2,522억원(일반회계 232억원, 특별회계 2조 2,290억원)
- 주요활동(기능)
 - 중소기업 관련 조사연구 및 애로사항 발굴, 정책건의
 -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직화 및 공동사업 추진 지원
 - 대·중소기업 협력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중소기업 공제사업 운영을 통한 도산방지와 경영안정 도모
 -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수출촉진, 글로벌화 지원

□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 민간주도 시장중심형 수출지원체계
 - 민간을 활용한 수출 유망기업 선별·지원
 - 대기업 및 현지 유통자본을 활용한 지원
- 수출중심으로 정책수단을 패키지로화
 - 1만개 수출기업화 후보군 구성
 - ※ 벤처(1,500개), 이노비즈(1,000개), 지방청(4,000개) 등
 - 수출을 중심으로 5대 정책수단(R&D, 마케팅, 자금, 인력, 제도) 연계
-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 판로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수출지원
 - 온라인 서비스 인프라 통합지원체계 마련
- 진출지역 및 수출품목 다변화
 - 유망신흥시장(아세안, 중남미 등) 진출촉진 및 기존 주력시장 내 세그먼트 시장 공략 강화
 - 신소재·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 R&D의 전략성 강화 및 관리체계 전문화

- 중소기업 R&D 전략성 강화
 - 성과지향형 R&D 추진 : 성과창출가능기업 중점육성 등
 - 대상에 따른 지원방식 다변화·효율화
- R&D 수혜범위 확대
 - 중소기업 공동 R&D확대 (협회·조합)
 - 중소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술획득에 대해서도 R&D와 동일하게 세제혜택 등

□ 벤처·창업의 생태계 고도화

- 창업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강화
 - 석·박사, 연구원 등 고급인력 창업확대
 -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성장지원 및 협업
-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 벤처 창업기업 글로벌 투자유치
 - ※ 해외 민간투자 중개사이트에 홍보, 설명회 등
 - 벤처·이노비즈 R&D, 마케팅 등 연계 지원

□ 소상공인 과당경쟁 방지 및 경쟁력 제고

- 과당경쟁 방지를 통해 폐업률 축소
 - 자발적인 과밀분야 진입억제 유도
 - 과밀진입정보를 “상권정보시스템”에 공표
 - 과밀분야 지원 차등화(정책자금 가산금리 등)
 - 소상공인의 아세안 등 국가별 진출 촉진
- 장인기술 기반 소공인 육성
 - 산업생태계 內 소공인 육성전략 수립
 - 숙련기술 전수 및 사회적 활용 촉진
- 상가임대료 상승 억제로 영업권 보장
 - (핵심상권) “자율상권법” 제정 및 자율상권 육성
 - (전통시장)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 기반 정책지원
 - (일반상가)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상가임대차법)